

패스객관식감정평가관계법규 수정사항 20210301

p34 문27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34 문6해설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p143 문55해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서면 또는 구술 -> 서면, 2미터)

p143 문90해설

(×,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x))

p158 문27번 문제해설수정

27.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법률 제19조1항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8. 경관에 관한 사항
-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8의3.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 3.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답 ⑤

p211 문81 해설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부지	10년 이내 사업 미시행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p235 문1 정답 ②

p294 정답수정

06번 공권->사권

29번 (20만원), 500만원 -> 1,000만원

p295 문제2 해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물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사물

p336 문77 해설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

공유재산 특례	- 유사한 제한 ×, - 가격제한 × - 교환금액: 규정(대장 3천 이상 2개 법인등, 3천 미만 1개 법인등)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or 1개 이상 평가법인등
---------	--

p64 문78 지문 ③번 수정

③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p371 문3 문제 및 해설

p357 문9, P378 문13, P378 문14, P379 문15

가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재

p345 문93 해설수정

⑤ 일정재산은 -> 일반재산은

p385 문27 문제수정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되는 건축물의 신축

p404 문63 해설수정

- ①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③ 위험물저장소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다.
- ④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관련 시설이다.
- ⑤ 운동장은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운동시설이다.

p414 문81 해설수정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 **건축물의 해체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한편, 중간검사제도는 폐지되었다.

p468 문36 문제수정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된 것은?

p489 문73 문제수정

- 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p189 문44 해설수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절차의 하자에 대해 대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은 없다. 지형도면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함.

정답 ②

p556 문57 문제 및 해설수정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련된 아래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의 신청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